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지역 불균형 돌파구 '전주 특례시 지정'

자치행정권 강화 · 광역시 버금가는 예산 지원 가능

전주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을 받...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 13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실시된 가운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의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 돌파구, 전주 특례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총 18조원으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뭍을 행하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취지는 무색하기만 하다.

다육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도 있다.

또한, 전주시처럼 도(道)의 도청 소재지인 중추도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비록 100만 명 이상은 아니지만 생활인구 및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그간 대도시와 버금가는 등 준광역시급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남권, 광주·전남권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정부의 지원이 수십 년 동안 집중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 등의 입지는 더욱 약화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

주·전남과 같은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받아온 역차별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전주는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의 행정 중심지로서 조선시대 3대 도시로 불렸고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대 도시로 손꼽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국가지원이 집중되고,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으면서 이제는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됐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시작, 지방분권 실현 끝까지 앞장선다!

전주시는 2018년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65만2879명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수...

전북, 광역시가 없어 수십년 동안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 '특례시 지정 요건50만 이상 중추도시' 법안 국회 통과돼야

요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전주에서 살거주하는 생활인구와 공동생활권인 완주군 생활인구 등을 합해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로, SKT와 KT가 지난 10월 전주의 생활인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최대 전주시 생활인구는 90만118명, 전주와 완주를 합한 생활인구는 103만2983명으로 각각 조사돼 전주·완주의 행정실수요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주는 해마다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꼭 통과해야 한다.

시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하나로 모아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와 기대효과 등을 적극 알려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회와 관할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건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전주시는 같은 처지에 놓인 충북 청주시, 전주·청주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세미나를 열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 '1+2' 아닌 '1+1'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특례시가 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만,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전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유지되지만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치행정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일례로, 국회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광역시에 버금가는 국가예산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또한, 특례시에는 보통교부세를 상향해서 정액료를 보조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기업 유치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재원 증가에 따른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된다.

여기에, 전주 특례시 지정이 실현되면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이 국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의 글을 올리는 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송효철 기자

폐기물환경개선방안 연구회 다올마당 출범

전주시는 13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만성지구 주민대표와 시민연합,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 연구회' 출범을 위한 다올마당(이하 폐기물환경개선방안 연구회 다올마당)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환경개선방안 연구회 다올마당 출범을 위한 회의 모습

이들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수차례의 다올마당 논의를 통해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 연구회 운영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방향과 세부운영과제 등에 논의하게 된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 연구회 다올마당은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기에 앞서 주민과 환경단체, 팔복동 산업단지 내 업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다올마당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실용성 있는 환경개선방안 연구회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전주를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성관계 동영상 보고 내연녀 살해 40대 항소심 실형

재판부, 징역 15년 선고 원심 유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불가"

인터넷에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분노해 내연녀를 살해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씨(4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2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내연녀 B모씨(당시 57)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본 이후부터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석훈 기자

전주푸드, 유럽 내추럴 와인과 만나다

국제한식조리학교, 16~17일 페스티벌 개최

프랑스·이탈리아 와인메이커 20여명 방문

시민들을 위한 매너·요리강좌 등도 진행

전주푸드와 유럽의 내추럴와인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국제한식조리학교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전주 푸드 앤 내추럴 와인 페스티벌'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국제한식조리학교와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내추럴와인은 자연적인 재배방식을 바탕으로 양조과정에서도 최대한 인공적인 개입을 줄인 와인으로 건강한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미식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의 내추럴와인메이커 20여명이 전주를 방문해 시민과 국내외 미식여행객에게 내추럴와인을 소개한다. 앞서, 지난해 전주를 한 차례 방문했던 이들 내추럴와인메이커들은 그날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슬로시티이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글로벌 유력

전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조인력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들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식사 등을 돕는 보조인력으로 파견키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1억원을 투입, 전주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어르신들을 보조인력으로 파견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조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익에서 차별 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전주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어르신 시장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주간보호시설 종사인력의 업무 경감과 이용자 보호의 공백방지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전주시니어클럽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한 어르신들에 대한 면접을 거쳐 먼저 5개소에 9명의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추가인력을 선발해 파견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올해 6000만원 투입... 농기계 1대당 100만원 한도

전주시가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농촌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총 6000만원을 투입,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농기계 1대당 100만원 한도이며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기계목록집에 등재된 500만원 이하의 정부지원 중소형 농기계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지역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농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

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농가는 오는 3월 7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는 영농규모와 농산물 생산 기반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여년 간 시비 5억 원을 투입, 농가에 520여대의 중소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도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 만든 10대 2명 추가로 붙잡혀

컬러복사기를 사용해 지폐를 위조한 10대 2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본보 2월 13일자 4면)

안산경찰서는 13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A모군(19)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간첩체포된 B모군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8일 전주 시내 편의점과 술집 등에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3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 시내 사업장을 돌며 위조지폐를 사용한 뒤 거스름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김석훈 기자

카센터 물품 훔친 60대 검거

카센터 마당에서 소비를 훔친 60대 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3일 절도 혐의로 A모씨(64)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5시 51분경 익산 시내 카센터 마당에 차 수리를 위해 놓아둔 소비 등 총 2회에 걸쳐 시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해 지난 12일 오후 7시경 A씨를 검거했다. /김석훈 기자

태블릿 PC 훔친 40대 덜미

화장실에 놓고 간 태블릿PC를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13일 절도 혐의로 A모씨(4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시 10분경 완주군 B사무소 1층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태블릿PC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석훈 기자